

제2016 - 1호 (통권 17권)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소식

NEWSLETTER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소식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N E W S L E T T E R

CONTENTS

1 권두언	05
사회과학 확대하는 정부정책, 발상전환이 필요하다 ▪ (사)한국사회과학협의회 제 19대 회장 이진규	
2 한국사회과학협의회	06
창립40주년 기념식 및 세미나 개최	
3 한국사회학회 · 한국사회과학협의회 공동 특별 심포지엄	07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 사회 · 정치변동과 민주주의 ▪ 한국사회과학협의회 부회장, 이화여대 사회학 교수, 한국사회학회장 조성남	
4 세미나	09
한국사회의 인구변동과 세대갈등 ▪ 한림대 사회학 교수 성경룡	
5 남기고 싶은 이야기	11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의 초창기 사업들의 성과 ▪ 서울대 인류학과 명예교수 · 학술원회원 한상복	
6 학회동정	16
7 협의회 행사	18
8 기타소식	19
9 학회 임원진 소개	20



사회과학 홀대하는 정부정책, 발상전환이 필요하다

한국연구재단의 2015년 대학연구활동 실태조사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도 전국 4년제 대학 전임교원수는 76,750명이며 이 가운데 사회과학 분야 교원수가 17,700명(23.1%)으로 전체의 4분의 1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공학(15,660명, 20.4%)은 물론 의약학(15,917명, 20.7%) 분야보다 많다. 문제는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과학 분야에 정부 R&D 예산의 0.43%만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메르스 사태, 세월호 사고 등 재난형 사회문제가 빈발하고 노령화와 인구 절벽, 사회양극화와 청년실업, 자살과 성폭행 등 전방위적 난제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문제를 정부는 어떻게 해결하려는가? 자연의 문제는 과학기술이, 사회문제는 사회과학이 해결해야 하는 것이 답이다. 지진을 사회과학이 해결할 수 없듯이 살인과 성폭행 범죄를 과학기술로만 막을 수는 없다. 영국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골목에 첨단 지능형 CCTV를 수천대 설치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것보다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EPTED)'이라는 사회기술이 비용 대비 효과가 훨씬 더 높다는 것이 입증된 사례를 보라.



(사)한국사회과학협의회
제 19대 회장 이진규

사회과학은 사회현상을 다루며 이에 대한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학문이다. 지난 수십년간 지속된 정부의 이공계 중시 정책에 밀려 한국의 사회과학계는 고사할 위기에 놓여있다. 정부의 R&D 예산 중 사회 과학 분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2015년에도 고작 0.43%에 불과하다. 어쩌면 이러한 사회과학 홀대가 오늘의 전방위적 사회문제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한국의 사회과학자들은 묵묵히 연구를 계속해왔지만, 대부분 단발적이고 서구 이론에 치우쳐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는 기본적으로 연구지원의 부족에 근거한다. 한국 학계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 연구 집단이 정부 R&D 예산의 0.43%를 지원 받는 현실속에서 사회과학은 이제 학문 후속세대의 양성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앞으로 한국 사회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연구는 엄두를 내기 어렵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2010년부터 시작한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약칭 SSK) 연구지원 사업은 이러한 광범위한 사회문제를 전 사회과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여 장기적으로 한국형 사회과학 이론과 지식 기반을 마련해줄 한 줄기 희망이었다. 그러나 2010년 150억원에서 출발한 SSK 연구지원 예산은 2014년에 297억원으로 정점을 찍고 2015년에는 273억원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사업 시작 당시 소형 연구팀 300개를 연차적으로 선정하여, 통합과 집중을 통하여 세계적 수준의 대형연구센터 45개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소형 연구팀 예산 지원의 중단으로 SSK사업은 좌초하기 일보 직전이다. 더구나 작년과 올해 신규 소형 연구팀을 선정하기 위한 예산이 전무하여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대형연구센터를 구축하는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한국의 사회과학계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한국이 산업화와 민주화 그리고 세계화를 이룩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그러나 한국의 사회과학계가 앞으로 한국 사회가 당면하게 될 더 큰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미래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해야 하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공계 일변도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SSK 사업을 비롯한 사회과학 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충할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창립 40주년 기념식 및 세미나 개최

본 협의회는 지난 9월 9일 오후 고려대 안암캠퍼스 백주년기념삼성관 국제원격회의실에서 ‘창립 40주년 기념식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재)미래인력연구원이 후원했다.

이날 열린 기념 세미나에서는 최장집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가 ‘한국사회과학 발전에 관한 하나의 숙고’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최장집 교수는 발표에서 사회과학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국가권력에 대한 학문공동체의 자율성과 학문에 헌신하는 학자 또는 연구자들이 지적 탐구의 주제설정으로부터 연구방법과 이론, 연구내용과 결과에 이르기까지 그들 연구의 모든 과정에서의 자유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문연구의 재정적 원천이 공적지원에만 의존하는 것은 극히 위험하므로 학문지원의 재정적 원천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조성남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의 사회로 한국교육학회 진동섭 회장(서울대-교육학과 교수)과 한국문화인류학회 정병호 차기회장(한양대-문화인류학과 교수)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어서 진행된 40주년 기념식에서는 본 협의회 이진규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협의회 15대 회장을 맡았던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기념사를 했고, 염재호 고려대 총장이 축사를 했으며, 대한민국학술원 김동기 부회장이 격려사를 했다. 리셉션에서는 사회과학분야의 원로인사들과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역대 회장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진규 회장은 “우리 협의회는 사회과학의 융합과 통섭을 위한 정책 포럼과 학술대회를 지속적으로 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사회과학 발전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사회학회 · 한국사회과학협의회 공동 특별 심포지엄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 사회 · 정치변동과 민주주의〉 개최



한국사회과학협의회 부회장, 이화여대 사회학 교수
한국사회학회 회장 조성남

한국사회과학협의회(회장: 이진규)와 한국사회학회(회장 조성남)가 공동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 - 사회 · 정치 변동과 민주주의」라는 제목으로 2016년 3월 31일에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심포지엄은 한국연구재단, 경향신문, 서울연구소가 후원했다. 이번 행사는 2016년도 한국사회학회 특별위원회가 기획한 「지역순회 특별 심포지엄: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의 첫 번째 순서로 개최한 서울 대회였다.

한국사회학회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화두로 “우리의 현대사에서 민주주의가 꽃피었던 적은 언제인가?” “급변한 사회변동과 함께 우리의 민주주의는 어디쯤 와 있는가?” “정치제도의 변화와 더불어 정당정치의 권력구조 속에서 민주주의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짚어보며, 답을 모색하고,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한 공론장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심포지엄을 기획하였다.

한국 현대사에서, 1960년 4월의 민주주의가 비록 짧았지만, “첫 번째 민주주의 시대” 를 열었다면, 1987년 6월의 민주주의가 오랜 군부독재를 마감하고, “두 번째 민주주의 시대” 를 열었다고 할 것이다. 그로부터 약 30년의 시간이 지난 오늘, 87년의 민주주의는 시민의 실질적 삶과 분리된 채 대의정치의 장식이 되고 말았고, 불안한 사회와 희망 없는 시대라는 현실 속에 양극화와 불평등의 골은 더 깊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직면하며, 한국사회학회는 87년의 민주주의가 그 진화를 멈춘 이래 이제 “세 번째 민주주의 시대” 를 모색하는 것이야말로 시대의 과제가 되었다는 문제의식 아래 사회과학분야의 공론장을 열고자 시도하였다.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 를 대주제로 한국 민주주의의 복원, 나아가 새로운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을 독려하기 위해, 서울을 출발하여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특별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각 지역에서 국회, 정당, 광역자치단체, 지역 시민사회의 관심을 모아내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첫 번째 행사인 서울 대회에서는 한국 사회와 정치 변동에 따른 민주주의의 위기와 그 혁신방향에 관해 사회학, 정치학, 법학 등 다양한 학제 영역의 저명한 연구자들이 발표하고 토론했다. 이날 행사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균형과 평등을 향하는 서울: 협치와 혁신이 만드는 도시 민주주의” 라는 기조강연으로 시작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경청과 소통이라는 서울시정의 원칙, 공개 · 공유 · 속의 · 참여라는 “도시 민주주의2.0” 의 이념, 그리고 제도정치를 넘어 경제와 사회 차원에서의 민주주의 확대를 강조했다.

1부 세션의 첫 번째 발표는 중앙대 신광영 교수의 “한국사회 불평등과 민주주의” 로, 한국의 낮은 투표율이 사회경제적 변수와 관련이 깊으며, 고용불안정과 소득격차 등 불평등이 심해질수록 저소득층과 노동계급의 투표율이 낮아져서 불평등 구조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생기게 됨을 강조했다. 이어 고려대 조대엽 교수는 “공공성 프레임의 변화와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 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경쟁과 효율이 지배하는 97년 이후의 한국사회에서는 국가주의 프레임, 체계정치 패러다임을 넘어서 생활공공성과 생활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21세기 정보사회변동과 정치변동” 이라는 제목의 서울대 장덕진 교수의 발표에서는 인터넷, 트위터 등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에 따라 정치적 이슈의 확산과 여론의 변화에 대해 보여주며, 정치가 그로부터 영향받는 방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여주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사회학자들 뿐 아니라 정치학, 법학 등 인접 사회과학 분야의 저명한 학자들을 초빙하여, <정당정치와 헌법>에 관한 발표들로 2부 세션이 구성되었다. “한국 정당정치와 권력구조의 개혁과제” 의 주제로 발표한 한림대 최태욱 교수는 민의를 정당정치 영역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변화가 필수적임을 주장했다. 이어서 “한국의 헌법적 정체성과 헌법민주주의의 현실” 을 주제로 한 연세대 김종철 교수의 발표에서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민주공화국, 민주복지국가, 평화통일 지향이라는 헌법적 정체성을 뚜렷이 담고 있으며, 그것을 실현하지 않는 한국 정치와 사회 현실을 변혁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시민정치참여와 민주주의” 라는 정상호 서원대 교수의 발표에서는 ‘좋은 시민’ 을 통해 정치 양극화와 사회 분열을 치유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제도정치 참여, 외부에서의 사회참여와 사회통합적 가치지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한국사회학회와 한국사회과학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특별 심포지엄은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연합뉴스, 시사저널, 그 밖의 여러 지역신문에서 보도되는 등 많은 관심을 끌었다. 앞으로 남아 있는 광주, 대구, 부산 대회를 통해서도 학계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논하는 공론장으로 한국사회과학의 지평을 넓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국사회의 인구변동과 세대갈등



한림대 사회학 교수 성경룡

1. 한국사회 인구변동의 특이성과 세대갈등 문제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인구변동이 장차 사회 붕괴를 가져올 정도로 치명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러나 빠르게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동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으로는 전체 인구규모가 여전히 완만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 역설적이다. 바로 이런 역설로 인해 정책결정자와 일반 국민들 모두 인구문제와 세대갈등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착시의 함정에 빠지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총인구와 인구구조의 변동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현재 한국사회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고 장차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지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게 된다.

총인구구조와 인구구조의 변동 사이에 존재하는 이런 특이성 외에 세대갈등과 세대연대 현상이 동시에 전개되고 있는 것도 문제의 인식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총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급격한 인구구조 변동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론적으로 보면 세대갈등이 정책분야에서도 좀 더 뚜렷하게 분출되었어야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세대별 태도를 분석해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에 대해서는 세대갈등보다 세대연대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존재하고 있음이 발견된다. 성장과 복지, 남북관계 등에 대한 태도와 세대 간 상호평가에서도 세대갈등 보다는 세대연대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확인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두 가지의 가설을 제시해볼 수 있다. 첫째, 세대갈등은 이념과 정치영역에만 한정될 뿐 사회정책 영역에서는 특별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가족주의와 노인공경의 문화가 여전히 강한 한국사회에서는 그런 현상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가설이다. 둘째,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세대갈등이 정책영역과 여타 영역으로 확산되지 않는 이유는 현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라는 기조 속에서 복지를 부분적으로 확대하되 세금인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장차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세금인상을 하게 될 경우, 또한 청년실업률이 계속 증가하여 제한된 일자리를 두고 청년세대와 장노년세대 사이의 경쟁이 심화될 경우 머지않아 세대갈등이 폭발하게 될 것이라는 가설이다.

필자는 한국사회의 인구구조 변동이 너무나 빠르고 그 규모 또한 크다는 점, 나아가 고용의 양과 질이 모두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 기회가 청년세대에게 불공평하게 더 많이 차단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세대갈등이 빠르게 증폭될 것이라는 가설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한국사회는 세대갈등의 폭발을 기다리는 “폭풍 전야”의 상황에 놓여있다는 생각이 든다.

2. 세대갈등의 네 가지 요인

세대갈등을 증폭시킬 요인은 인구구조의 변동, 통합적 사회경제체제의 결여, 노인편향적 복지체제, 승자독식형 정치제도 등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먼저 인구구조의 변동은 연령대별 인구집단의 비중이 달라지는 것은 물론 시간이 흐를수록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들어 할 의존인구 부양비율을 크게 증가시키는 문제를 초래한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동은 2040세대와 5060세대의 세대갈등을 필연적으로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통합적 사회경제체제란 국민들에게 경제상황과 노동시장의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과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충분히 제공하고, 이런 틀 속에서 노사정 합의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목적을 통합적으로 실현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은 서로 단절되어 있고 사회안전망과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회정책은 대단히 취약한 반면, 노동시장유연화라는 경제정책 목적은 다른 정책을 지배하는 우선적 위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사회경제체제는 청년 고용의 양과 질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고, 일단 불안정 고용의 경로로 들어서면 평생 저임금과 빈곤에서 탈출하기 힘들게 만드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는 거시경제적 성과를 떨어뜨리고 직간접으로 세대갈등을 조장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악화시키는 체제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한국의 복지체제는 복지지출 수준이 GDP 대비 10.4%(2014)로 OECD 평균 21.6%의 절반 정도로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그 구성에 있어서도 연금, 노인 돌봄, 건강보험 등의 비중이 전체 복지지출의 70%를 상회하는 노인편향적(또는 노인지배적) 복지체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청년세대의 교육, 취업, 보육, 재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가족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비중이 지극히 미미하고, 이로 인해 복지체제 자체가 세대갈등을 부추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선거구제, 단순다수제(plurality voting), 양당제,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의 정치제도는 승자독식형 정치제도이다. 이런 제도하에서는 선거경쟁이 사생결단하듯 치열해지고, 이로 말미암아 선거에서 승리하려는 정치세력들이 표를 많이 가진 사회집단의 지지를 동원하기 위해 정치적 거래를 할 가능성이 많아진다. 득표극대화를 추구하는 정당들에게 표가 상대적으로 많고 투표율이 높은 5060세대는 2040세대보다 더 좋은 파트너로 부각되기 마련이다. 특히 5060세대는 이념적으로 보수성향을 가지고 있어 노후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보수정당과 긴밀히 협력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정부의 집권 기간이 길어지면 세대갈등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3. 세대갈등과 한국의 미래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구구조 변동과 여타 요인들은 한국사회의 세대갈등을 더욱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인구기반이 붕괴되고 세대갈등이 전면화되는 데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내에 통합적 사회경제체제를 구축하고, 청년세대와 노인세대의 삶을 균형있게 보살피는 세대공생형 복지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은 불가피하게 증세와 복지재정 확대를 요구할 것이고, 재정지출구조의 재조정도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가 승자독식형 정치와 후견주의적 정치를 재생산하는 후진적 제도에 발목이 잡혀있는 한 미래의 인구비극을 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미래는 정치권이 소개혁(비례대표 일부 확대, 세대별·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결선투표제 도입)이나 대개혁(비례대표 대폭 확대, 연립정부 운영, 의원내각제로의 전환)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세대갈등 문제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본 원고는 지난 5월 27일 한국사회과학협의회가 주최한 2016년 제 1회 세미나 발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한국사회과학(연구)협회 초창기 사업들의 성과*



서울대 인류학과 명예교수 · 학술원회원 한상복

1. 머리말

이 글은 필자가 한국사회과학연구협회(KOSSREC, 지금의 한국사회과학협회) 초대 회장(고병익)과 부회장(박동서)을 모시고 총무를 맡고 있었던 1970년대 후반, 3대 회장(한배호)을 모시고 연구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1980년대 초, 그리고 필자가 6대 회장을 맡고 있었던 1990년대 초에 있었던 사업계획과 워크숍 및 공동연구실적들에 관한 기록이다. 협회의 역사적 기록들이 모두 잘 보관되어있는지를 간사에게 물었더니 초창기의 기록문서는 전혀 보관되어있지 않다고 했다. 그래서 필자가 직접 관여했고 또 그 기록을 가지고 있는 협회 사업과 워크숍 및 연구과제와 그 결과보고서들을 바탕으로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여기에 쓰고자 한다.

2. 협회의 창립과 초창기 사업들 (1976-78)

한국사회과학연구협회가 창립된 것은 1976년 4월이었다. 첫 번째의 세미나를 「사회과학협동연구의 과제와 방향」이라는 주제로 1976년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춘천에서 개최하였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1973년에 제1집으로 발간하기 시작한 영문 사회과학논문집(Social Science Journal)을 사회과학연구협회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공동명의로 간행하기 시작했고, 영문 사회과학소식지(Newsletter)도 발간하였다. 당시 200쪽이 넘는 영문 사회과학논문집 1권 정가는 1천원이었고 외국에서 주문할 때는 1권당 배편 송료까지 포함하여 미화 3달러였다. 1976년 4월부터 한국사회과학연구협회가 아시아지역사회과학연구협회(AASSREC) 사무국을 유치하여 운영하였고, 한국, 필리핀, 방글라데시 사회과학협회와 공동으로 「관료제와 국가발전 비교연구」과제를 진행하였다. 아시아지역사회과학연구협회 소식지(Asian Social Scientists Newsletter)도 간행하였다. 1977년 10월 4일부터 8일까지 아시아지역사회과학연구협회 제2차 총회도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1977년도에 문교부 정책과제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을 받아 「한국문화의 연속과 변화에 관한 연구」(연구책임자 한상복)를 수행하여 제1차년도 연구결과보고서(4x6 배판 92쪽)를 1978년에 제출했고, 제2차년도(1978.4.1~1979.3.31) 최종연구결과보고서(4x6배판 320쪽)를 1980년에 제출하였다. 1977년에는 또 포드재단(Ford Foundation)에 연구비를 신청하여 3년 동안 약 10만 달러의 연구비와 협회 운영비를 받기로 약속받고 1차년도분을 수령하여 『한국사회과학연구인명록(Directory

* 편집자 주: 본 협회의 창립 40주년 행사를 개최하면서, 본 협회의 초창기 역사가 잘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더 늦기 전에 협회 초창기에 참여한 원로 회원들의 회고를 원고로 받아서, 뉴스레터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 시리즈로 연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원고들은 정차 본 협회의 역사를 단행본으로 간행하는데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of Social Scientists in Korea)』(1977. 6)을 발간하였고 「일제식민지정책 연구」(연구책임자 차기벽)를 3년간 수행하여 연구보고서를 1980년에 제출하였다. 포드재단의 연구비는 또 3년 동안 매년 신진 사회과학자들의 연구비 신청을 받아 2명에게 소규모 특별연구비가 지급되었다. 1978년에는 산학재단(産學財團)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환경에 관한 지각(知覺) 및 가치관 조사연구」 과제도 수행하였다. 1978년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회과학 정책세미나」를 유성에서 개최하였고, 같은 해 11월에는 속리산에서 「사회과학의 연구인력 양성」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3. 이루어지지 않은 한국사회과학재단과 한국사회과학연구원 설립계획(1978-79)

1978년 당시 박찬현 문교부장관의 사회과학 연구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 정책에 고무되어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는 동년 9월에 『한국사회과학재단설립안』을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명의로 작성하여 문교부에 제출하였다. 그 취지는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가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사회과학의 연구 활동을 국가발전목표에 부합될 수 있도록 진작시키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가칭 ‘한국사회과학재단’을 설립하는 동시에 ‘한국사회과학회관’을 만들어 국내 사회과학 여러 분야들의 유기적 연관성을 도모하고, 국제간의 연구협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다.

한국사회과학재단의 기금조성은 그 당시의 정부와 민간단체 및 민간인이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에 지원하고 있었던 연간 연구비 총액(10억원 추계), 그 이후 매년 20%씩 증액할 것을 예상하여, 5년 후에는 연간 20억원 이상의 연구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연구비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5년 후에는 적어도 200억원 이상의 연구비 지원액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근거에 따라 기금의 재원과 금액은 정부와 민간단체 및 민간인의 출자로 제1차년도에 20억원을 조성하고, 제2차년도부터 매년 전년도보다 10억원씩 증액 적립하여 5년간에 200억원을 재단의 기금으로 조성한다는 것이었다. 한국사회과학회관의 건립기금 산출은 1976년에 준공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과학기술회관 연건평(2,037평)과 1978년에 준공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연건평(4,817평)을 비교의 기준으로 삼았다. 이들 두 사례에 비추어 한국사회과학회관에는 한국사회과학재단의 본부,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사무실, 자료센터, 강당, 회의실, 사회과학 여러 학회사무실, 기타 부대시설과 건물이 집중될 것을 고려할 때 최소한 연건평 3,000평은 건립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회관 건립을 위한 기금은 회관의 위치와 대지 면적 및 각종 공사비 내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그 총액을 예상하기 어려우나, 건축 공사비를 평당 40만원으로 계산할 경우 연건평 3,000평의 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건축비만도 12억원이 필요하였다. 다만 회관의 위치는 자료센터와 여러 학회사무실의 이용 및 학술회의장소로 이용될 것을 고려할 때 도심지에서 너무 멀지않은 장소로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밝혔다.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회관의 위치와 대지면적 및 각종 공사비 내역이 확정되면 회관건립에 필요한 기금을 2년 내에 정부와 민간단체 및 민간인이 출자한 기금, 토지, 건물, 장비, 기구 및 기기(機器)로서 조성한다는 것이었다.

1978년 12월에는 뒤에 기술하는 바와 같이 외국의 사회과학분야 학술제도에 관한 현지조사를 행하였다. 그리고 1979년 1월부터 4월에 걸쳐 국내의 9개 주요 정부지원 연구기관들(가족계획연구원, 국제경제연구원, 국토개발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보건개발연구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을 방문하여 구체적인 사례연구(case studies)를 실시하였다. 그 자료들을 분석하여 『한국사회과학연구원 설립계획안 연구』라는 보고서를 박동서·한배호·임종철·한상복 명의로 1979년 4월 문교부에 제출하였다. 그 보고서의 목차만 소개하면 한국사회과학연구원의 설립취지, 설립목적, 기능 및 연구과제, 설립 근거·지원 및 절차, 직제(기본원칙, 이사회의 구성, 이사장과 원장, 하부직제), 인원, 재원 등이고, 부록으로 국내 주요 연구기관의 정관, 설립의 목적·기능·재산과 회계·임원 및 이사회·자매연구기관·보칙(補則)·부칙(附則)·시설규모·근거 법령과 설립자 등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아쉽게도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가 작성하여 문교부에 제출한 위의 두 기관, 즉 한국사회과학재단과 한국사회과학연구원의 설립계획 제안은 성사되지 않았다.

4. 외국의 사회과학분야 학술연구제도에 관한 현지조사 (1978)

1978년 12월 14일부터 29일까지 16일에 걸쳐 문교부의 지원으로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회장(고병익)과 부회장(박동서)은 미국과 일본, 연구위원장(한배호)과 총무(한상복)는 유럽의 영국, 서독, 프랑스, 네덜란드 사회과학 분야 학술연구제도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보고서를 문교부에 제출하였다. 유럽지역 조사단에는 협의회 임원 외에도 사회과학 분야의 국내 대학교수 4명(김대환, 백충현, 한기춘,

한승조)과 문교부 학술 진흥 담당직원(이남영) 1명이 동참하였다. 이 현지조사의 목적은 한국의 현실에 적합한 사회과학 연구 지원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그런 체제를 앞서 확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및 유럽의 영국, 서독, 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경험적 사례 자료들을 현지에서 직접 수집하는 것이었다. 미국에서는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미국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 국립인문학재단(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 NEH), 포드재단(Ford Foundation), 미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SSRC), 미국학술회의(American Council of Learned Society), 아스펜인문학연구소(Aspen Institute for Humanistic Studies)를 방문하여 조사하였고, 일본에서는 일본학술진흥회(日本學術振興會)와 일본학술회의(日本學術會議)를 방문 조사하였다. 유럽지역에서는 프랑스의 파리7대학 · 파리정치대학 · 국립과학연구원(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CNRS) · 파리국제문제연구소, 서독의 본대학교 · 문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독일학술연구재단(Deutsche Forschungs Gemeinschaft, DFG), 서베를린 막스플랑크교육연구소(Max-Planck-Institut für Bildungsforschung, MPG), 네덜란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영국의 사회과학연구협의회(SSRC) · 대학보조금위원회 ·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등을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이상과 같은 외국의 현지조사 자료와 국가별 연구결과 및 정책건의는 연구보고서 『외국의 사회과학분야 학술연구제도에 관한 현지조사 보고서』(1978)에 포함되었다. 그 요점들을 몇 가지로 종합하여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 (1) 사회과학분야의 연구구성 전략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정부지원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 (2) 사회과학분야에 대한 연구비의 배분은 그 비율로 보아 다른 학문영역에 비해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 (3) 젊은 사회과학도들의 전문 인력 양성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 (4) 국가발전과 관련하여 기초사회과학연구에 1차적 중점을 두고 있지만, 정책과 응용 연구에도 관심과 재정적 지원을 기우리고 있다. 미래의 한국 사회과학 발전을 위한 정책건의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 (가) 사회과학뿐만 아니라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포함하는 모든 학술연구의 진흥을 종합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학술연구진흥재단(學術研究振興財團(가칭))을 따로 설립하여 대학, 연구기관, 학회의 연구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을 건의한다.
 - (나) 정부의 학술연구지원 예산을 증액하는 한편 다른 학문영역에 비해 사회과학분야에 대한 연구지원 예산을 증대시킬 것을 건의한다.
 - (다) 사회과학분야의 학술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사회과학연구원(社會科學研究院(가칭))의 설립을 건의한다.
 - (라)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韓國社會科學研究協議會)가 영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처럼 개척연구와 사회과학 분과 학회들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협동연구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건의한다.

5. 사회과학방법론 워크숍 (1981, 1983)

제1회 사회과학방법론 워크숍은 문교부 학술연구조성비의 지원을 받아 1981년 12월 12일(토요일)부터 17일(목요일)까지 6일 동안 사회과학연구협의회 주최로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International House에서 개최되었다. 워크숍의 운영위원은 김재은(위원장), 김광웅, 김경동, 문팔용, 임희섭이었고, 워크숍 참가 대상은 전국 각 대학과 연구소의 사회과학분야에서 방법론에 관심을 가지고 강의하거나 연구하는 전임강사 및 조교수를 우선으로 하였고, 참가자 수는 각 대학에서 총장이 추천하는 1명씩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그분들에 대해서는 사회과학협의회에서 숙식을 제공하였다. 강좌를 담당한 교수들이 강의안 원고를 미리 써서 워크숍 교재 『사회과학방법론』(사회과학연구협의회 1981, 4x6 배판 286쪽)도 제작하여 앞쪽에 협의회 제2대 회장(박동서)의 간행사도 실었고, 워크숍 참가자들에게 1부씩 배포하였다. 방법론 강좌 제목과 강사의 성명·직장·전공은 다음과 같다.

1. 철학적 기초
 - (1) 사회현상의 개념 (박이문, 이화여대, 철학)
 - (2) 실증주의와 사회과학 (소흥렬, 이화여대, 철학)
 - (3) 현상학과 사회과학: 사회현실의 의미 (김홍우, 서울대, 정치학)
 - (4) 해석학 (송동건, 한양대, 행정학)
2. 수학적 기초 (윤석범, 연세대, 경제학)
3. 개념 · 모형 · 이론 (1) (강신택, 서울대, 행정학)
4. 개념 · 모형 · 이론 (2) (문팔용, 건국대, 경제학)

5. 실험설계 (1) 차재호, (서울대, 심리학)
6. 실험설계 (2) 오세철, (연세대, 경제학)
7. 표본추출 (박성현, 서울대, 통계학)
8. 측정과 검사 (김재은, 이화여대, 교육심리학)
9. 면접과 질문서 (김경동, 서울대, 사회학)
10. 관찰방법 (한상복, 서울대, 인류학)
11. 자료조직 및 분석기술 (안문석, 고려대, 행정학)
12. 경험연구의 평가(1): 내용분석, RD index, factor analysis (이상우, 서강대, 정치학)
13. 경험연구의 평가(2): 아동의 노인에 대한 태도 (이은해, 연세대, 교육학)
14. 경험연구의 평가(3): 현대 농민사회와 양반 (조옥라, 서강대, 인류학)

제2회 사회과학방법론 워크숍은 제3대 회장(한배호) 재임 기간인 1983년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되었다. 제2회 워크숍 운영위원은 한상복(위원장), 김병주, 유영익, 이돈희, 이훈구, 조형, 김광웅이었고, 방법론 강좌 제목과 내용 및 강사진은 대부분 제1회와 동일하지만, 일부 강사들이 개인사정에 의해 참여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분으로 교체되었고, 교재의 내용도 일부 수정 보완되었다. 2회에 걸친 사회과학방법론 워크숍의 교재 내용을 김광웅 교수가 대표로 편집하여 집필자 22명의 이름을 밝히고,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편 『사회과학 방법론』(국판 392쪽) 단행본을 1983년 1월 30일자로 발행하였다.

6. 「방사성 폐기물 관리」 및 「과학기술인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 연구 (1992)

필자가 6대 회장직을 맡고 있었던 1992년에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와 과학기술인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를 협의회가 주관하여 수행하였다. 우선 「방사성 폐기물 관리의 국민 이해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과제는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설 원자력환경관리센터의 연구비 지원으로 한상복(연구총괄책임자 서울대, 인류학), 김영평(고려대, 행정학), 양종회(성균관대, 사회학), 이정전(서울대, 경제학), 유홍준(성균관대, 사회학)이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전국 14개 시도의 표본조사 응답자 529명을 대상으로 질문지에 의한 면접조사를 1992년 4월 3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하고, 자료를 분석하여, 최종 보고서(4x6 배판 210쪽)를 7월에 제출하였다. 그 조사연구분석의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원자력과 방사성 폐기물에 관한 지식의 정도가 높을수록 원자력과 방사성 폐기물 처분에 대하여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 (2) 응답자들은 대부분 원자력에 관한 정보를 신문과 방송 등 언론 매체를 통하여 얻고 있으며, 그 내용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이 많았다.
- (3) 응답자의 극소수만 반핵단체에 관여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대체로 젊은 층의 교육수준이 높은 학생이나 전문 관리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다.
- (4) 원자력발전이나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대한 지역 유지나 여론지도자들의 영향력은 크지 않았고, 신뢰도 또한 높지 않았다.
- (5) 원자력발전과 방사성 폐기물 관리 정책결정 과정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충분히 공개적이지 못하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6) 응답자들은 원자력발전에 관한 정책에 불만이 있더라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을 선호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 (7) 응답자들은 대부분 전문가, 정부,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원자력발전 시설 부지나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의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 (8) 원자력 발전과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은 9가지로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 1) 원자력 발전과 방사성 폐기물에 관한 정보의 공개
 - 2) 지속적인 홍보의 필요성
 - 3)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 4) 정책결정 과정에 주민참여의 기회 확대
 - 5) 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협력사업의 확대

- 6) 정기적인 시설 운영의 사후평가제도의 도입
- 7) 반핵단체들과의 직접적인 대화와 협동체제의 확립
- 8)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지지하는 중간조직의 활성화
- 9) 전문가, 정부대표, 주민대표를 포함한 특별 민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두 번째의 조사연구과제인 「과학기술과 사회문화에 대한 과학기술인의 의식조사 및 과학기술의 특실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태도 연구」는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의 연구비 지원으로 한상복(연구총괄책임자), 김영평, 양종희, 이정전, 유홍준, 박영인(고려대), 김선준(한양대)이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질문지조사를 1992년 6월부터 7월에 걸쳐 실시하고, 자료를 분석하여 최종보고서(4x6배판 492쪽)를 10월에 제출하였다. 과학기술인의 범주는 대학의 이학·공학·농수산·의약계 전임교원, 정부출연연구기관·국공립시험연구기관·민간인연구기관·산업기술연구조합·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이학·공학·농수산·의약계 박사급 연구원으로 규정하였다. 조사대상 기관의 과학기술인 수는 대학교원 252명, 정부출연 및 국공립연구소 연구원 116명,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 51명으로 총 419명이었고, 일반국민의 표본 수는 529명이었다. 그들의 조사항목에 대한 응답자료 분석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평가: 과학기술인들은 한국의 정치적 민주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지만, 경제적 불평등이 우려되고, 사회 기강이 서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
- (2) 사회적 만족도와 개인의 성취도: 대학, 기업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원의 순서로 만족도와 성취도가 높았다.
- (3) 과학기술에 대한 태도: 과학기술의 부작용으로 꼽히는 것은 첫째가 환경오염이고, 둘째는 인간성의 상실과 소외이며, 셋째는 첨단무기에 의한 대량살상이다.
- (4) 과학기술 연구업적에 대한 평가: 특히 순수 기초과학 분야와 첨단과학 분야의 연구업적이 매우 낙후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 원인은 연구개발 투자 특히 정부의 정책 지원의 결여로 지적되었다.
- (5) 미래사회에 대한 인식: 이 문제는 1970년도에 실시했던 델파이(Delphi) 기법을 다시 사용하여, 한 세대 이후(2020년대)의 사회를 어떻게 예상하는가를 조사하여 비교하였다. 그 반응은 한 세대 후에 추구될 가치로서 건강, 장수, 인간성, 인격 등의 근대적인 가치가 지배적이었다. 미래의 경제생활, 환경, 과학기술의 변화에 대한 예측은 여성과 나이 많은 연구자들이 상대적으로 비관적인 전망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남북통일의 시기에 대한 질문에서는 젊은 연구자들이 오히려 비관적인 반응을 보였다.
- (6) 과학기술의 특실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과 태도: 일반 국민들은 과학기술의 유리함이나 편리함보다는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폐해를 훨씬 더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회동정

1. 경제사학회

〈전국역사학대회〉

- 주제 : 자유 주제
- 일시 : 2016년 10월 29일 (토) 13:30~18:00
- 장소 : 서울여자대학교 50주년 기념관 402호

2. 국제개발협력학회

〈UNESCAP 동북아개발협력 포럼〉

- 주제 : Development cooper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일시 : 2016년 10월 28일~29일 (금~토)
- 장소 : 중국 소주

〈2016년 특별세미나〉

- 주제 : 유엔 SDGs 이행과 국제개발협력 그리고 입법과제
- 일시 : 2016년 11월 8일 (화)
- 장소 : 국회의원회관

〈2016년 통계학술대회〉

- 주제 : 한국형 ODA
- 일시 : 2016년 12월 9일 (금)
- 장소 : 한국행정연구원

3. 대한지리학회

〈2016년 정기 학술 대회〉

- 주제 : 접합의 공간: 지리학의 새로운 도전과 통찰력
- 일시 : 2016년 6월 24일 (금) 9:00~6:00
- 장소 :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국제회의장

4. 한국경영학회

〈한국경영학회 창립60주년 및 매일경제 창간 50주년 기념〉

- 주제 : 대한민국 기업 명예의 전당 헌액식
- 일시 : 2016년 10월 18일 (화) 14:20~18:00
- 장소 : 신라호텔 영빈관 루비홀

5. 한국경제학회

〈2016년 한국경제학회 국제학술대회〉

- 주제 : 신흥국과 선진국의 통화정책에 관한 최근 이슈 (Recent Issues in Monetary Policies for Emerging-Market and Advanced Countries)
- 일시 : 2016년 10월 13일 (목) 09:00~17:10
10월 14일 (금) 9:00~13:00
- 장소 : 웨스틴 조선호텔 (Cosmos and Violet Room)
- 주최 : 한국경제학회, DSGE 연구회, SSK 중형 연구팀 (신 신흥국 경제론 연구팀)

6. 한국교육학회

〈교육정책포럼〉

- 주제 : 지능정보사회 대비 미래 교육정책 방향과 과제
- 일시 : 2016년 4월 8일 (금) 9:00~11:30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지하 2층)

〈2016 연차학술대회〉

- 주제 : 한국 교육의 현실과 한국 교육학의 과제
- 일시 : 2016년 6월 24일~25일 (금~토)
- 장소 :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

7. 한국국제정치학회

〈2016 한국국제정치학회 60주년 기념 연례학술대회〉

- 주제 : 한국 국제정치학 1956-2016 : 평가와 미래 전망
- 일시 : 2016년 12월 1일~3일 (목~토)
- 장소 : 서울 양재동 국립외교원 및 외교센터

8. 한국문화인류학회

〈제 56차 정기 학술대회〉

- 주제 : 경계의 인류학
- 일시 : 2016년 10월 28일~29일 (금~토)
- 장소 : 신한대학교

9. 한국사회복지학회

〈2016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공동 학술대회〉

- 주제 : 사회복지학, 실천현장의 '고뇌'를 고민하다
- 일시 : 2016년 10월 21일~22일 (금~토)
- 장소 : 연세대학교(서울)

10. 한국사회학회

〈2016년도 한국사회학회 후기사회학대회〉

- 일시 : 2016년 12월 16일~17일 (금~토)
- 장소 : 서울시립대학교

11.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 창립 70주년 기념 학술대회〉

- 주제 : 한국사회 70년, 심리학 70년
- 일시 : 2016년 5월 20일 (금) 10:00~18:30
- 장소 : 코엑스 오디토리엄

12.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학회 2016년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 주제 : 한국 언론학 연구와 교육의 진화
- 일시 : 2016년 10월 15일 (토) 10:00
- 장소 :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13.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회 추계 학술대회〉

- 주제 : 젠더와 테크놀로지: 여성주의적 미래 전망
- 일시 : 2016년 11월 19일 (토)
- 장소 : 전북대학교

14. 한국정치학회

〈추계학술회의〉

- 일시 : 2016년 10월 21일~22일 (금~토)
- 장소 : 강원도 속초 마레몬스 호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한국정치학회 공동주최 특별학술회의〉

- 일시 : 2016년 11월 4일~5일 (금~토)
- 장소 : 전라북도 부안

〈연례학술회의 개최〉

- 일시 : 2016년 12월 9일~10일 (금~토)
- 장소 : 국립외교원

15.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 창립 60주년 기념행사〉

- 일시: 2016년 10월 12일 (수) 17시
- 장소: 한국언론진흥재단 20층 프레스룸

〈2016년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 주제 : 미래사회와 행정학의 재설계 (II)
: 21세기의 신행정학
- 일시 : 2016년 12월 9일~10일 (금~토)
- 장소 : 고려대학교

협의회행사

I. 협의회 회의

1. 2016년 제 1차 운영위원회
 - 일시 : 2016년 2월 16일 (화) 18:30~20:00
 - 장소 : 밀레니엄힐튼호텔 이태리식당 일폰테
2. 2016년 제 1차 운영협의위원회
 - 일시 : 2016년 2월 29일 (월) 8:00~10:00
 - 장소 : 플라자호텔 일식당 무라사키
3. 전임회장단 간담회
 - 일시 : 2016년 5월 20일 (금) 12시
 - 장소 : 플라자호텔 일식당 무라사키

II. 세미나

1. 2016년 제 1회 세미나
 - 주제 : 인구변동과 세대갈등
 - 일시 : 2016년 5월 27일 (금) 16시
 - 장소 :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이무현홀
 - 발표자 : 한림대 사회학과 성경룡 교수님

III. 심포지움

1. 한국 민주주의 미래 (I) -사회 정치변동과 민주주의-
 - 일시 : 2016년 3월 31일 (목) 13:00~18:30
 - 장소 :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 주최 :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과학협의회
 - 후원 : 한국연구재단, 경향신문, 서울연구원

IV. 창립 40주년 기념식 및 세미나

- 주제 : 한국사회과학 발전에 관한 하나의 속고
- 일시 : 2016년 9월 9일 (금) 16:00~19:30
- 장소 : 고려대학교 100주년기념 삼성관 지하 1층 국제원격회의실
- 발표자 :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V. 심포지움 및 정기 총회

- 주제 : 인구변동과 미래의 한국
- 일시 : 2016년 11월 18일 (금) 14:00~20:00
- 장소 : 연세대 백양누리 지하 1층 최영홀(B110)

VI. 2016년 6월 KSSJ 43-1호 발간



기타소식

1. 중국사회과학원 박광해 교수님의 번역으로 서울대학교 이근 교수님의 논문 (제목 : "亚洲国家的追赶, 超越, 落后与亚洲发展模式")이 중국 학술지 <국외사회과학> 2016년 제1기 (114 - 122쪽) 에 번역 게재되었습니다. 한국사회과학협회는 한국사회과학의 연구 성과를 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번역료를 지원하였습니다.
2. 원우현 몽골 국제대 부총장 미디어학부 개원 세미나
고려대 미디어학부 명예교수이자 한국사회과학협회 제 14대 회장을 역임한 원우현 이사가 몽골 국제대학(MIU) 부총장으로 부임하였다. 지난 4월 MIU 국제언론정보연구원과 미디어학부를 창립한 원우현 부총장은 현지 언론 환경을 대대적으로 끌어올릴 야심찬 프로젝트를 준비하여 지난 9월 2일 몽골 국제대에서 미디어학부 개원을 기념해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창근 광운대 명예교수, 임준수 시러큐스대 교수 등 언론 분야 한국 석학과 현지 미디어업계 고위 관계자, 정치인이 두루 참여했다.



협회 임원진 소개

>> 회장단

회 장	이진규	고려대 경영학
		(전) 한국인사조직학회장 (14대)
부회장	김재휘	중앙대 심리학
		(현) 한국심리학회장
	박찬욱	서울대 정치외교학
		(전) 한국정치학회장 (2011년)
	조성남	이화여대 사회학
		(현) 한국사회학회장
조장욱	서강대 경제학	
	(현) 한국경제학회장	
진동섭	서울대 교육학	
	(현) 한국교육학회장	
감 사	김지수	영남대 경영학
	손승영	동덕여대 여성학

>> 이사회

백완기	고려대 행정학 (명예교수)
안병영	연세대 행정학 (명예교수)
원우현	고려대 언론학 (명예교수)
이종원	성균관대 경제학 (명예교수)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 (명예교수)
임희섭	고려대 사회학 (명예교수)
정용덕	서울대 행정학 (명예교수)
정운찬	서울대 경제학 (명예교수)
차재호	서울대 심리학 (명예교수)
한상복	서울대 인류학 (명예교수)



>> 집행위원회

연구	한 준	연세대 사회학 (위원장)
	김옥태	방송통신대 미디어영상학
	김주현	충남대 사회학
	배 영	송실대 정보사회학
	이윤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
	정일환	대구가톨릭대 교육학
편집	손 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위원장)
	김치욱	울산대 국제관계학
	손원숙	경북대 교육학
	이승주	중앙대 정치국제학부
	정재용	카이스트 경영학부
대외협력	박 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경제학 (위원장)
	김이경	중앙대 교육학
	정안교	한림대 경영학
	최진영	서울대 심리학
	하세헌	경북대 정치외교학
	허경선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사무국	박찬수	고려대 경영학 (국장)
	전성희	간 사

>> 운영협의위원회

경제사학회	박기주
	성신여대 경제학
국제개발협력학회	손혁상
	경희대 공공대학원
대한지리학회	양보경
	성신여대 지리학
한국경영학회	유창조
	동국대 경영학
한국경제학회	조장욱
	서강대 경제학
한국교육학회	진동섭
	서울대 교육학
한국국제정치학회	최영중
	가톨릭대 국제학
한국문화인류학회	유철인
	제주대 철학
한국사회복지학회	박병현
	부산대 사회복지학
한국사회학회	조성남
	이화여대 사회학
한국심리학회	김재휘
	중앙대 심리학
한국언론학회	조성겸
	충남대 언론정보학
한국여성학회	오정화
	이화여대 영어영문학
한국정치학회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
한국행정학회	유평준
	연세대 행정학

(사)한국사회과학협의회

03028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왕산로 1길 25 (사직동)

T. 02-735-2159 F. 02-737-3264

E-mail. kossrec10@naver.com

Homepage. www.kossrec.org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25 Inwangsan-no 1 gil, Jongno-gu, Seoul 03028, Korea

Tel. 82 - 2 - 735 - 2159

E-mail. kossrec10@naver.com Homepage. www.kossrec.org

발행인 : 이진규

